

맹견,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공격한 개는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된다. 단 안락사를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반려인과 동물단체 측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등록된 맹견 수는 2만여 마리로, 전체 개(662만 마리)의 0.3% 수준이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블테리어 등 6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공격성이 큰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캥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대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블테리어 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체고 40cm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된다.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된다.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공공장소에서 2m 이내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아파트 복도 등 협소한 장소의 경우 지자체장이 조례로 소유자가 안전거나 목줄 길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 없고, 어린이 집과 유치원, 초·중·특수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

수입은 훈련을 이수한 맹견에 한해 허용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소유자에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개물림 사망사고 최고 3년 징역 사람 물면 무조건 '관리대상견'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부과기로 했다.

상해·사망사고 발생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근거도 됐다. 사람이 숨질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단 반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국장은 "바로 안락사(조치)로 가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고령성 개선) 안 되면 안락사하

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 담당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한다.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 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시스



고드름이 녹아오 절기상 대원을 이틀 앞둔 18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한 개울가에서 공공 연 고드름이 따뜻한 날씨에 녹아 내리고 있다.

전남 서부 해양환경 위반 91건 적발...전년 비 17% 감소

전남 서부해역의 해양환경 위반 사범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양경찰청이 지난해 235회에 걸쳐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해양오염 행위 등 해양환경 관련 위반사항 9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적발건수 110건 대비 17%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항으로는 기름부 서명 누락, 폐유저장용기 선명·선박번호 미표기 등 경미사항이 54건으로 가

장 많았다.

또 기름유출 29건, 해양오염 방지설비 미검사 등 의무규정 위반 4건, 해양오염물질기록부 미비치 등 행정질서 위반 4건으로 분석됐다.

적발 대상은 선박 61건(부산선 20, 예인선 19, 어선 10, 유조선 7, 화물선 2, 여객선·폐기물운반선·준설선 각 1)으로 67%를 차지했으며, 조선소 및 기름저장시설 25건(27%), 해철업체 및 하역시설 5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선박 입·출항이 잦

은 목포시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암군 18건, 신안군 15건, 진도군 5건, 영광군 3건, 해남군 1건이다.

양안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지도 점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예방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중국 광둥서 350억원 위안화 위폐사건 적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2억4400만 위안(약 355억4330만원) 규모 위안화 위조지폐 사건이 적발됐다고 광둥일보(粵州日報)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광둥성 공안 당국은 최근 대규모 위안화 위조지폐단을 일망타진하고 2억4400만 위안 상당의 가짜 지폐를 몰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래 최대 위조지폐 사건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공안 당국은 작년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허리케인(颶風) 31호'라고 명명된 수사에 착수해 그간 일당 14명을 검거하는 한편 거액의 위폐와 제조 설비, 원료를 찾아내 압수했다.

당국은 위조지폐가 시중에 나돌기 전에 다행히 사건을 적발했다고 광둥일보의 소개했다.

광둥성 주창(珠川) 삼각주 지역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 인적 흐름, 물류, 자금 유통이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요인 등으로 위조지폐 유통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이번 위조지폐를 찍는 데는 용지 3이 쓰였으며 액면 100위안짜리 위폐는 장당 6위안에 팔았다고 한다.

위폐제조 일당은 위조지폐를 찍어 1200만 위안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美 청소년 사이서 '세제먹기' 유행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이드 포즈(Tide Pods) 등 캡슐형 세탁제를 먹는 영상이 유행하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타임지가 보도했다.

미 독극물중독센터협회(AAPCC)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심대들이 의도적으로 캡슐형 세탁제를 먹은 사례가 39건 접수됐다. 각각 2016년 39건, 지난해 53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몇 해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캡슐형 세탁제를 먹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이 늘어났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세계 캡슐이 맛있는 과일이나 과자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미 소비자 전문가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타이드 포즈를 비롯한 캡슐형 세탁제들은 입과 소화기관을 태울 수 있는 에탄올과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돼 있다. 위장장애와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제성분이 혈액과 장기에 유입될 경우 치명적이다.

세계 제조업체 타이드의 모기업 프록터앤갬블은 성명을 통해 "캡슐형 세탁제를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세제는 세탁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 가정용 청소 제품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난민촌 로힝야족 100만명 돌파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사는 로힝야족이 100만명이 넘었다고 AFP가 17일 보도했다.

미얀마 접경지역 난민촌에서 로힝야족 난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사이두르 라흐만 육군 중장이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100만4742명이 난민으로 등록했다"며 "이들에게 생체정보가 인식된 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등록하지 못한 로힝야족이 수천 명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수치는 유엔이 발표한 수치보다 많다. 유엔은 미얀마 접경 방글라데시 남동부에 로힝야족 약 90만20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8월25일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州)에서 로힝야족을 탄압한 이후 지금까지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족은 모두 65만5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육군도 지난해 8월부터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어 온 로힝야족에 대해 신체정보를 인식한 등록증을 발급해주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얀마 정부와 합의한 대로 로힝야족 송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지난 16일 이를 2년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송환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미얀마 정부도 지난 16일 송환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AFP는 난민촌에 있는 로힝야족 대부분이 귀국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놀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시가득들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입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에 한정하며, 이외 다른 검진 필요시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